

「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」 기업 실태조사 결과

2021. 10.

< 조사개요 >

※ 「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」는 중소기업중앙회·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314개 기업(50인 이상)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임.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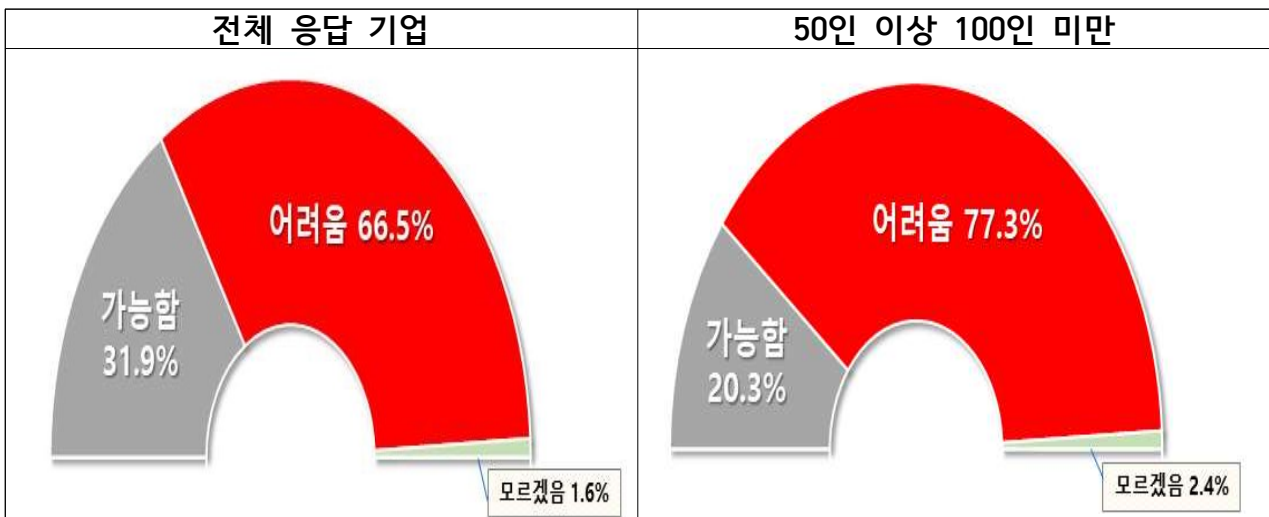
KEF 한국경영자총협회

1 '내년 법 시행일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준수 가능여부'는 '어려움' 66.5%(50인~100인 77.3%), 그 이유는 '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' 47.1%

□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('22.1.27) 까지 준수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, 전체 응답 기업의 66.5%,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.3%가 '어려울 것'이라고 응답함

※ 50인 미만 기업은 '24.1.27부터 시행

< 그림 1 > 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가능여부에 대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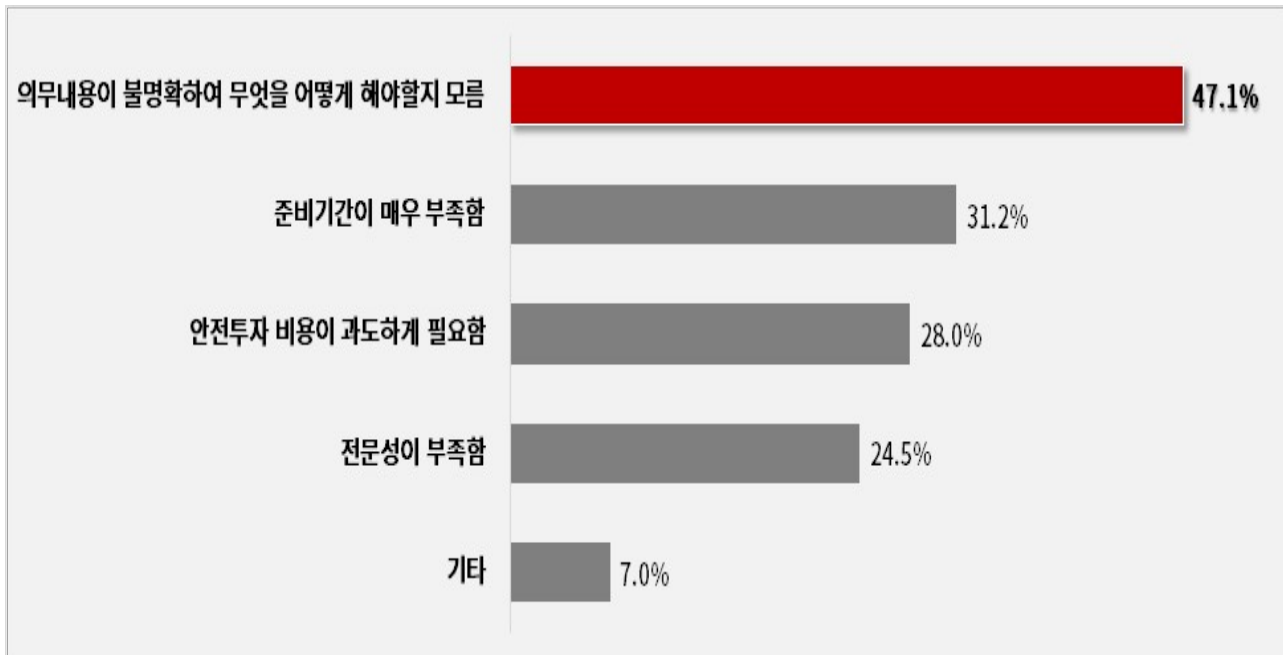
-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(67.7%), 중소기업(66.2%) 모두 의무준수가 어려울 것이라 응답하였으며,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-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높지 않아 법 이행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
< 표 1 > 기업규모별 법 준수 가능여부에 대한 응답

	전체	대기업	중소기업
매우 가능	9.6%	7.7%	10.0%
다소 가능	22.3%	24.6%	21.7%
다소 어려움	38.2%	50.8%	34.9%
매우 어려움	28.3%	16.9%	31.3%
모르겠음	1.6%	0.0%	2.1%

- '의무준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47.1%가 '의무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'이라고 답변함

< 그림 2 > 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가 어려운 이유



※ 2개 복수응답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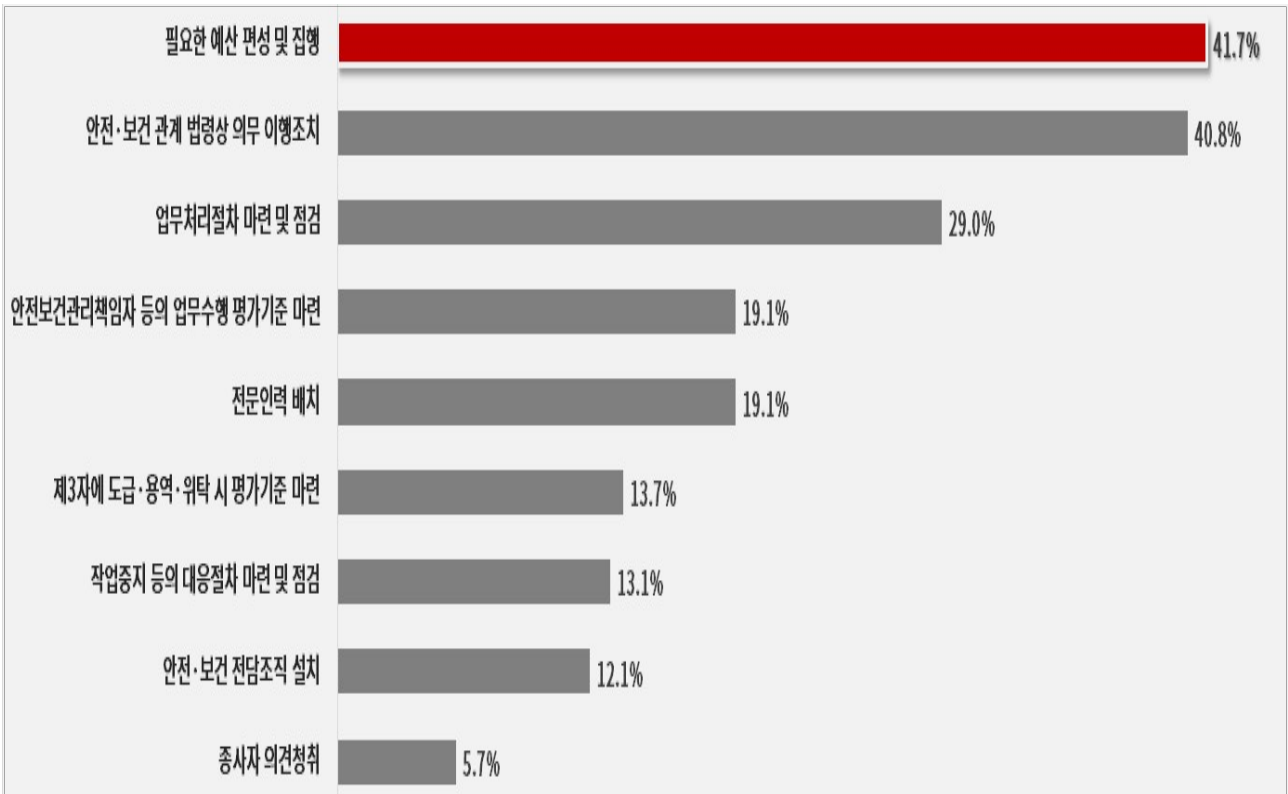
-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(63.1%)과 중소기업(43.0%) 모두 '의무내용의 불명확성'이라 응답하여,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이 법 준수 이행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- 그 외에는 '준비기간 매우 부족'(31.2%), '안전투자 비용 과도하게 필요'(28.0%), '전문성 부족'(24.5%) 순으로 집계됨

2

‘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’은 ‘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’ 41.7%, ‘안전·보건 관계 법령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’ 40.8%

-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 응답 기업의 41.7%가 ‘인력, 시설 및 장비의 구비,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’, 40.8%가 ‘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’을 지적함

< 그림 3 >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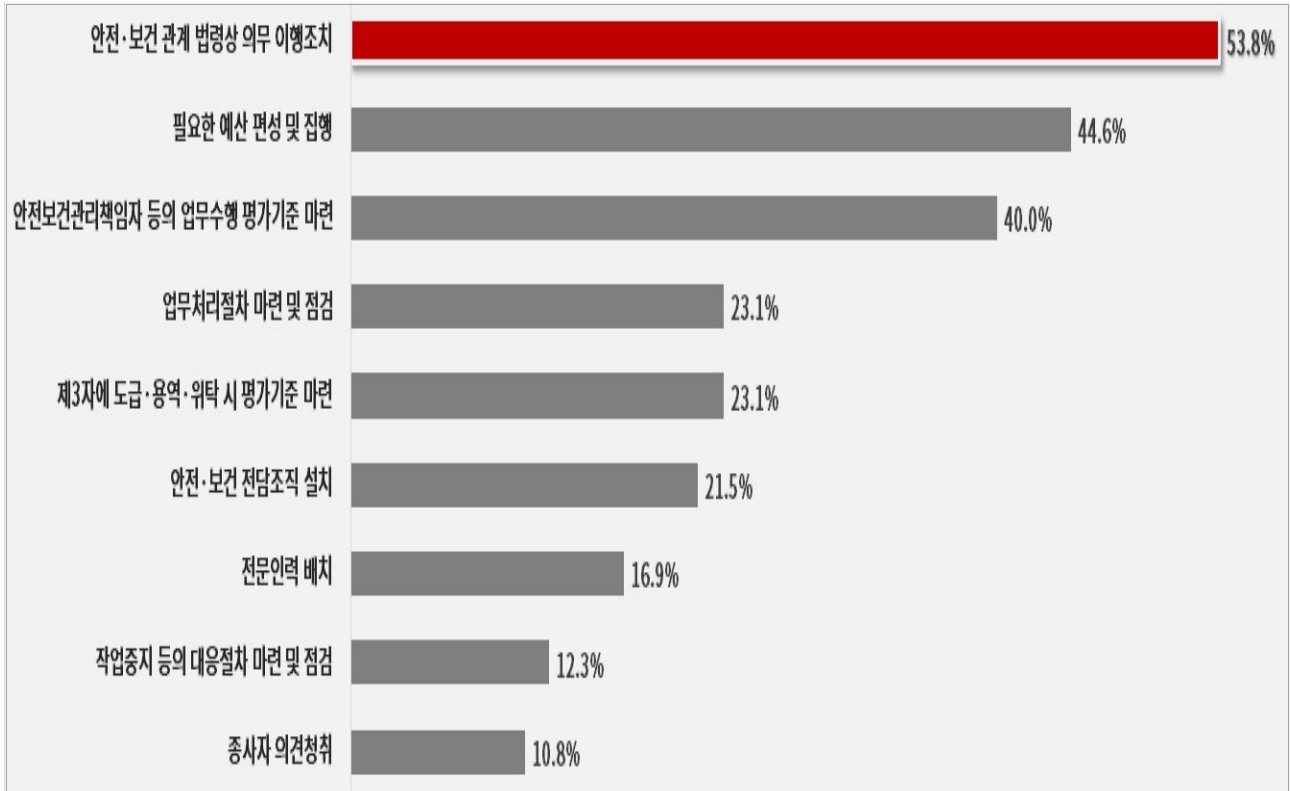


※ 2개 복수응답 가능

- 그 외 ‘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점검’(29.0%), ‘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관리’, 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’(19.1%) 순으로 응답함

- 대기업은 ‘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’(53.8%) 답변이 가장 높았는데, 이는 시행령에 관계 법령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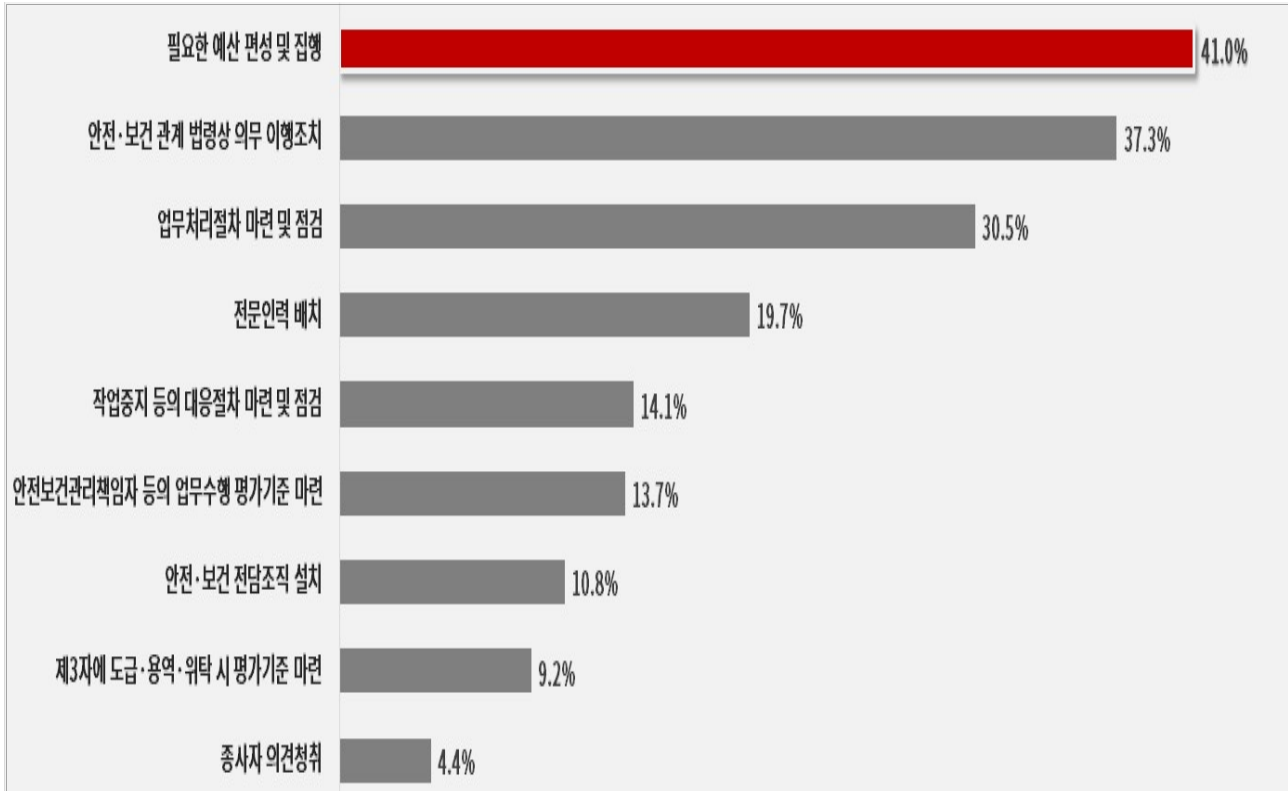
< 그림 4 > 대기업에서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



※ 2개 복수응답 가능

- 중소기업은 ‘인력, 시설 및 장비의 구비,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’(41.0%)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, 열악한 인력과 재정상황에 따른 규정 준수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
< 그림 5 > 중소기업에서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



※ 2개 복수응답 가능

- 규정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으며, 주로 정부의 지원 및 근로자 인식 부족, 비용부담 문제 등을 가장 많이 제기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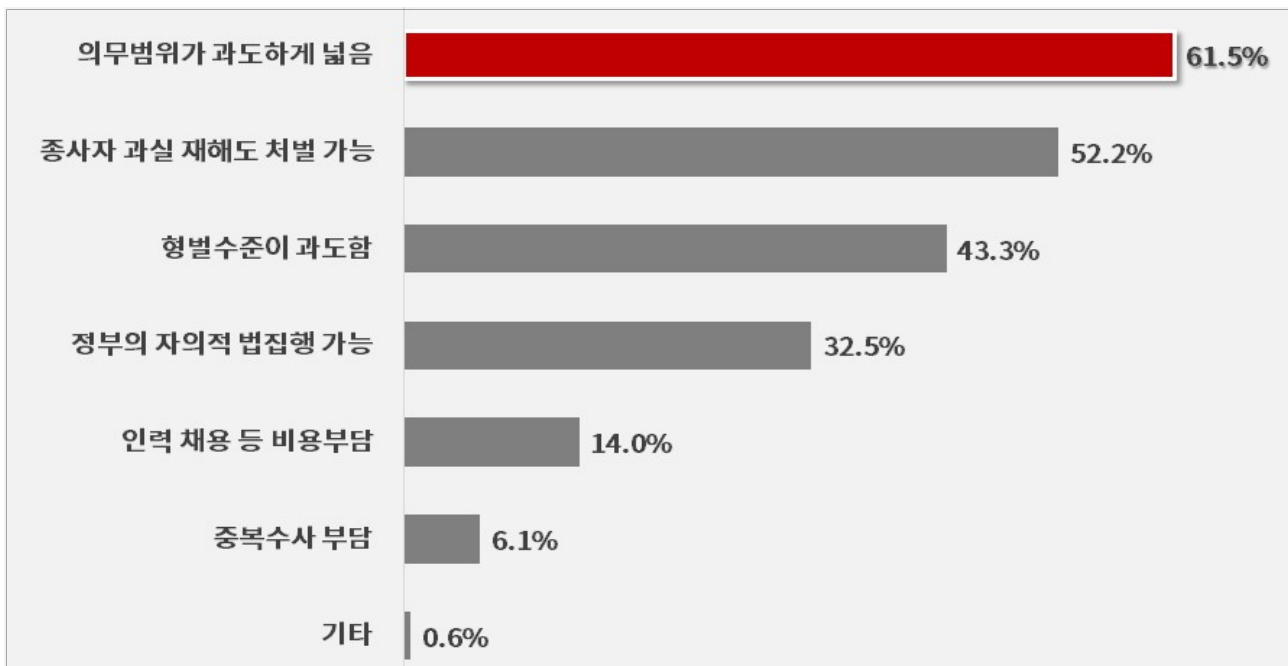
< 참고 > ‘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’ 필요 이유(서술 답변)

- ▶ 정부의 해설서, 가이드 등의 배포가 늦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해야하는지 모르겠음
- ▶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함에도 현장 근로자의 인식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임
- ▶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이 부족함
- ▶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배치로 인한 비용부담은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
- ▶ 전문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함

‘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**‘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’ 61.5%, ‘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’ 52.2%, ‘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’ 43.3%**

-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기업의 61.5%가 ‘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’, 52.2%가 ‘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’, 43.3%가 ‘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’이라고 답변함
 -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(1년 이상 징역)을 경영자에게만 묻고,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

< 그림 6 > 법령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



※ 2개 복수응답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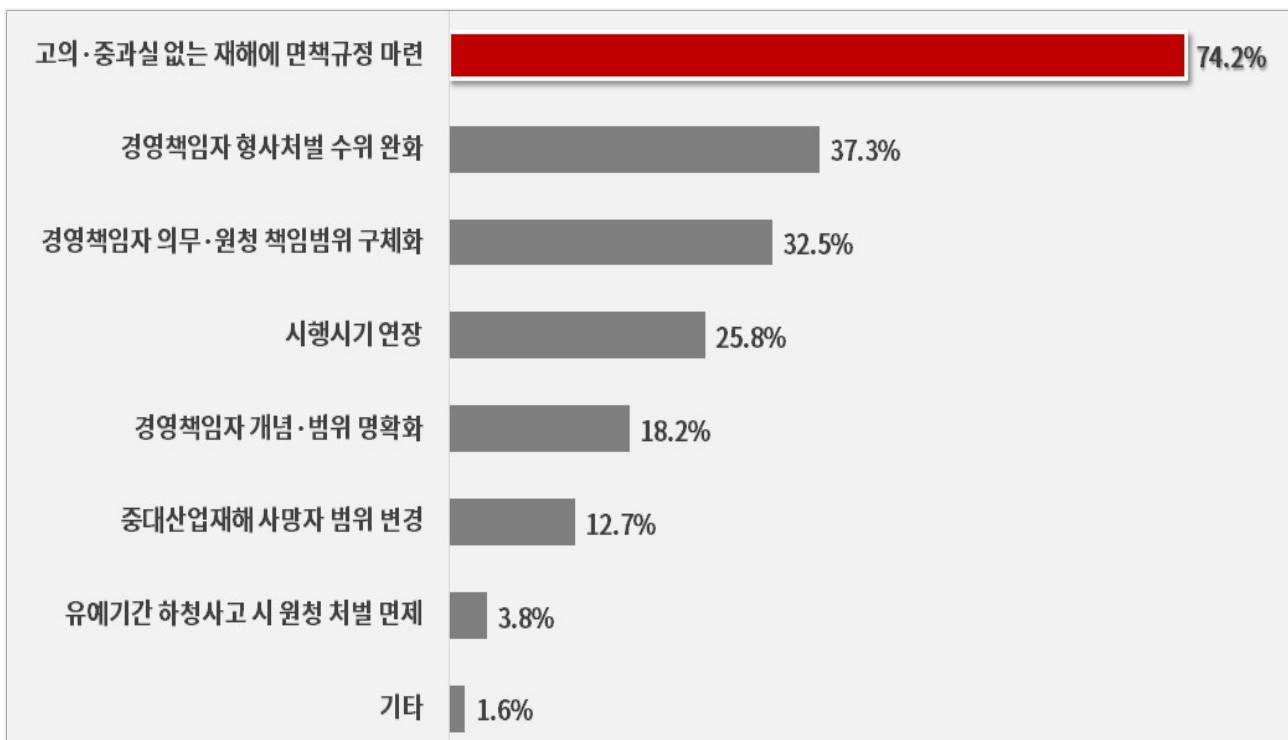
- 그 외 ‘의무사항이 모호하여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’(32.5%), ‘인력 채용 등 비용부담 증가’(14.0%), ‘감독기관(고용노동부 등)과 경찰의 중복수사 부담’(6.1%), ‘기타’(0.6%) 순으로 집계됨

4

‘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「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」 74.2%, 「형사처벌 수위 완화」 37.3%

-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74.2%가 ‘고의·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’, 37.3%가 ‘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’라고 답변함
- 그 외 ‘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’(32.5%), ‘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장’(25.8%), ‘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 명확화’(18.2%)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 변경(12.7%) 등 순으로 집계됨

< 그림 7 >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답변



※ 2개 복수응답 가능

- '면책규정 마련' 이외 우선순위에서는 대기업은 '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'(52.3%), 중소기업은 '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'(37.3%)로 선택됨

< 표 2 > 기업규모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사항

구분	전체	대기업	중소기업
고의·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	74.2%	80.0%	74.7%
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	37.3%	36.9%	37.3%
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	32.5%	52.3%	27.3%
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장	25.8%	30.8%	24.5%
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 명확화	18.2%	30.8%	14.9%
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 변경	12.7%	10.8%	13.3%
유예기간 중 발생한 50인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	3.8%	3.1%	4.0%
기타	1.6%	1.5%	1.6%

-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,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됨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(‘22.1.27)됨에 따라,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1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함

이에, 중기중앙회·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기업의 준비 현황과 의무준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 개정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2. 조사대상

중기중앙회·경총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314개 기업*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

- * 50인 ~300인 미만 중소기업 : 249개
- 300인 이상 대기업 : 65개

3. 조사기간 : 2021년 9월 13일 ~ 9월 24일 < 12일간 >

4. 조사방법

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

5. 주요 조사항목

-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가능 여부
-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
-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기업 애로사항
- 법률 재개정이 시급한 규정 등

6. 회수설문 수 : 총 314개 기업. 끝.